

1911년의 汪精衛

- 楊度와의 國事共濟會 활동을 중심으로

金 衡 鍾*

머리말

汪精衛는 20세기 전반기를 특징짓는 중국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정치적 격변을 몸소 겪으며, 그 흐름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1930년대 후반 抗日戰爭期에 일본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대신 협력을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대표적인 매국노·‘漢奸’으로 알려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후반의 경력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의 행적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¹⁾ 따라서 革命家로서 그가 명성을 떨쳤던 20세기 초반기의 辛亥革命期와 달리 1920-1930년대 國民革命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 1) 이 글은 1930년대 이후의 汪精衛에 대해 주목하는 글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연구성과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도 黃東淵, 「중국현대사 이해의 문제점들과 그 극복의 전망」, 『中國現代史研究』 10, 2000; 文明基, 「비판의 무기와 무기의 비판 - 汪精衛정권과 아시아주의에 관한 대화 -」, 『中國現代史研究』 11, 2001; 黃東淵, 「포퓰(褒貶), 실증(實證), 목적론(目的論) - 왕징웨이(汪精衛)의 대일(對日)합작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들 -」, 『中國現代史研究』 12, 2001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소개해둔다. 또한 최근에도 文明基, 「中日戰爭 初期 汪精衛派의 和平運動과 和平理論」, 『東洋史學研究』, 71, 2000; 裴京漢, 「중일전쟁 시기 중국에서의 東亞聯盟運動과 汪精衛政權」, 『中國近現代史研究』 21, 2004; 裴京漢, 「汪精衛와 西安事變」, 『中國近現代史研究』 38, 2008의 연구가 있다.

期和 南京國民政府 시기 활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辛亥革命期 그의 혁명 활동이나²⁾ 여기에서 다루려는 1911-1912년 시기의 행동³⁾ 역시 그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크게 유보되거나, 아니면 袁世凱에게 매수를 당해 혁명을 ‘배반’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하였다는 점은 과거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⁴⁾

-
- 2) 이 시기의 汪精衛에 대해서는 馮自由, 『中華民國開國前革命史』第二冊(臺北世界書局, 1954); 蔡德金, 『汪精衛傳』(四川人民出版社, 1987); 聞少華, 『汪精衛傳』(吉林文史出版社, 1988); 李理 等, 『汪精衛評傳』(武漢出版社, 1988); 蔡德金, 『汪精衛生平紀事』(中國文史出版社, 1993); 王關興, 『汪精衛傳』(安徽人民出版社, 1993); 黃美眞·李華興, 『辛亥革命前後的汪精衛』, 『辛亥革命時期的歷史人物』(中國青年出版社, 1983); 趙矢元·田毅鵬, 『辛亥革命時期的孫中山和汪精衛』, 『社會科學戰線』, 1986-4; (美國)王克文, 『汪精衛與辛亥革命, 1905-1912』, 牛大勇 等編, 『中外學者縱論20世紀的中國 - 新觀點與新材料』(江西人民出版社, 2003); 永井算巳, 『中國近代政治史論叢』(汲古書院, 1983); 波多野善大, 『辛亥革命期の汪精衛』, 『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 25-3, 1983 等の 기존연구에 의거하였다. 참고한 국내의 연구로는 최근에 이 시기의 汪精衛를 조감한 裴京漢, 『신해혁명 시기의 汪精衛』, 『中國近現代史研究』 30, 2006도 있다.
- 3) 胡鄂公, 『辛亥革命北方實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53輯, 臺北文海出版社, 1970); 張國鑒, 『辛亥革命史料』(龍門聯合書局, 1958); 聞少華, 『汪精衛與國事共濟會』, 『南開學報』, 1985-3; 劉民山, 『汪精衛在辛亥革命前後的叛變活動』, 『歷史教學』, 1985-4; 邵銘煌, 『激情過後: 汪精衛在辛亥革命前後的轉變與歷史作用』, 中國史學會編, 『辛亥革命與20世紀的中國』上(中央文獻出版社, 2002); 李英銓, 『汪精衛與辛亥革命』, 『安徽史學』, 2003-5; 劉煥峰·張波·劉鳳穩, 『辛亥革命時期的汪精衛和袁世凱的關係』, 『張家口師專學報』, 1904, 2003; 吳相湘, 『袁世凱謀取臨時大總統之經過』, 『中國現代史叢刊』(正中書局, 1960); 沈雲龍, 『汪兆銘與袁世凱』, 『傳記文學』, 94-5, 1986; 永井算巳, 『汪兆銘の庚戌事件とその政治背景』, 『中國近代政治史論叢』(汲古書院, 1983); 永井算巳, 『辛亥南北議和交渉の經過』, 앞의 책; 藤岡喜久南, 『袁世凱의 總統就任』, 『東洋學報』, 48-3, 1965; 波多野善大, 『辛亥革命的南北議和と汪兆銘』, 『小野勝博士頌壽記念東方學論集』(京都, 1982) 등.
- 4) 謝曉鵬, 『30年來中國大陸汪精衛研究述評』, 『安徽史學』, 2010-5를 참조. 최근에는 林闊 編著, 『中國最卑劣的漢奸王 汪精衛全傳』, 上·下(中國文史出版社, 2001)도 1911년 석방이후 汪精衛의 활동을 다루는 제목을 “최초로 기회주의적 본능을 드러내다(初顯兩栖本能)”고 잡고 있는데(pp.35-48), 책의 제목이나 이 목차의 설정만으로도 汪精衛에 대한 평가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武昌蜂起에서 南京臨時政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1911년 말-1912년 초의 짧은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辛亥革命期 저명한 革命家 가운데 한 사람인 汪精衛가 보여주었던 행동의 의미에 대해 음미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가 이 무렵 楊度와 함께 조직하였던 國事共濟會(이하 共濟會로 약칭)라는 조직을 둘러싼 활동과 그것이 당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中國同盟會와 『民報』의 중요한 활동가 가운데 한사람으로서 辛亥革命 시기 대표적인 革命派의 한 사람이었던 汪精衛는 1910년 攝政王 載豐의 암살 음모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영구구금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던 중 武昌蜂起 후 清朝의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석방되었다. 그 이후 汪精衛의 南京臨時政府 성립 시기까지 활동을 요약한다면 대체로 清朝에 의해 총리대신으로 임용된 袁世凱와 접촉을 가진 다음 그를 위하여 袁世凱의 심복인 楊度와 함께 共濟會를 조직하여 ‘袁世凱 옹립’을 위한 여론 선전에 임하고 나아가 북방에서의 혁명 봉기를 저지하며 막후에서 南北議和와 清朝의 퇴진, 袁世凱의 臨時大總統 취임을 위해 진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聯袁倒清’이라 할 수 있는⁵⁾ 이러한 汪精衛의 활동은 사실상 그가 『民報』의 대표적인 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혁명사상이나, 中國同盟會에 가담한 이후 보여준 孫文의 가장 충실한 심복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의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치적 상황의 급변에 따른 전술적·전략적 태도 변화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혁명사상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革命派의 대표적인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가 立憲派의 주장에 ‘굴복’하여 연합하게

5) 이를테면 丁賢俊, 「論孫中山民元讓位」, 『歷史研究』 1988-6의 연구를 참조.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보통 革命派와 立憲派의 논쟁, 그리고 革命派의 압승으로 묘사되는 이 시기의 사상적 지형도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共濟會에서 그와 함께 대표로 나선 사람이 楊度였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楊度は 梁啓超와 노선을 약간 달리 하였지만 立憲派의 사상을 가장 잘 제시해준 한 인물이었다고, 辛亥革命 직전 立憲運動의 핵심이었던 國會速開運動을 가장 먼저 제기하여 그것을 立憲運動의 주축으로 만들기도 하였다.⁶⁾ 뒤에서 다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그는 특히 滿·漢·蒙·回·藏 五族의 존재 때문에 革命이 발생하면 중국에서 五族의 分離獨立이 뒤따르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외국의 개입과 瓜分이 초래되므로, 民主立憲革命은 절대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우고 있었다. 立憲派의 ‘反革命’ 논리였던 ‘革命瓜分論(革命은 瓜分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핵심 요소를 그가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革命派와 立憲派의 대표적인 과거 논객들이 이렇게 기묘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양자의 정치적 경쟁이라는 점에서 보

6) 辛亥革命期の 楊度와 그의 立憲論·民族論에 대해서는 陶菊隱, 『籌安會六君子傳』(中華書局, 1981)외에도 趙金鈺, 「楊度與<<中國新報>>」, 『近代史研究』, 1981-3; 李里峰, 「楊度對清末民族問題的認識」, 『華中師範大學學報』, 38-1, 1999; 馬先彥, 「清末民初民族融合思潮考略」, 『貴州民族研究』, 2002-4, 2002; 黃興濤, 「民族自覺與符號認同: 中華民族觀念萌生與確立的歷史考察」, 郭雙林等編, 『中國近代史讀本』, 下(北京大學出版社, 2006); 彭劍, 「楊度在憲政編查館任職新考」, 『歷史檔案』, 2007-2; 李國棟, 「清末民初關於民族問題的論戰」, 『青海民族研究』, 18-3, 2007; 廖發堂, 「試論楊度的金鐵主義說」, 『邢臺學院學報』, 23-2, 2008; 周小喜·肖紅花, 「論楊度君主立憲思想」, 『長沙大學學報』, 23-4, 2009; 敖福軍, 「民族與國民-簡述楊度的民族觀」, 『大連民族學院學報』, 12-2, 2010; 李曉東, 『近代中國의 立憲構想-嚴復·楊度·梁啓超와 明治啓蒙思想』(法政大學出版局, 2005. 특히 제3장 「國會速開論」から「帝制」まで - 楊度の場合)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楊度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黃昊, 「楊度研究述評」, 『黑龍江史志』, 224,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면 한쪽의 승리와 다른 한쪽의 패배라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共濟會 활동이나 汪精衛·楊度の 역할에 대해서는 이 시기의 그들 자신에 의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1930년 汪精衛의 행적과 직접 연결시켜 혁명에 대한 ‘叛變’이라든가 袁世凱에 대한 ‘투항’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이다. 하지만 이후의 행적에 비추어 이 시기의 汪精衛를 평가하는 게 그다지 적절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自明하다. 실제 이 시기와 그 이전의 사상·행적을 통해 汪精衛의 활동이 결코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최근의 辛亥革命期 汪精衛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물론 이 글의 목표는 그러한 긍정과 부정의 논쟁을 추적하면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汪精衛와 楊度の 共濟會와 관련된 활동의 새로운 내용을 추적해서 밝히려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전혀 달리 하여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전개될 수 있었으며, 그것이 辛亥革命의 역사적 흐름과 당시의 정치적·사상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11년 이전 汪精衛와 楊도가 ‘혁명’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정치적·사상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다.

7) 하지만 袁世凱를 이용하여 清朝를 무너뜨리려던 것이 도리어 袁世凱에게 조종당해 혁명의 과실을 빼앗기게 되었고, 民國의 출발은 처음부터 큰 착오를 낳게 되었다는 지적(沈雲龍, 『民國初建與南北議和』, 『傳記文學』 63-1, 1980, p.12)도 충분히 음미해 볼만한 것이다.

I. 辛亥革命期 汪精衛의 革命論과 ‘革命瓜分論’ 批判

1904년 廣東省 태생(祖籍은 浙江省)의 汪精衛(1883-1944)는 1904년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의 東京에 유학한 다음 法政大學 速成科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였고, 이 시기를 통해 서구적 국가체제나 정치사상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⁸⁾ 하지만 1905년 7월 일본으로 건너온 孫文과 접촉하게 된 汪精衛는 1905년 8월 中國同盟會가 결성되기 전부터 孫文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中國同盟會의 章程을 기초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선발되고, 성립대회에서 中國同盟會의 評議部 부장으로 선발된 것, 그리고 中國同盟會의 기관지인 『民報』가 창간되자 그 주요 기고자가 된 것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그는 同鄉출신의 胡漢民·朱執信·廖仲愷 등 혁명가들과 함께 孫文의 핵심추종자(이른테면 孫文派 또는 廣東派라고도 할 수 있다)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점은 中國同盟會 성립 직후 淸朝의 압력 아래 일본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取締規則’에 반발하여 유학생 집단이 대부분 동맹휴학과 귀국을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 廣東派가 孫文의 지지 아래 ‘維持留學界同志會’를 조직하여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였던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⁹⁾

그리고 孫文이 1907년 일본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汪精衛는 胡漢民과 더불어 학업을 중단하고 그를 따라 東南亞로 향하여 孫文이 감탄할 정도로 충실한 革命運動의 조력자 역할을 계속하였다. 1909년 말 잠시 일본에 귀국하였던 汪精衛가 孫文이 이끈 10차 武裝蜂起의 잇따른 실패 이후 암살활동으로 전환하여 1910년 초 北京에서 攝政王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고, 이후 武昌蜂起의 발발

8) 汪精衛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직접 작성한 「自傳」이 『東方雜誌』 31-3(1934)에 실려 있다. 이하 辛亥革命期 汪精衛의 행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앞서 든 연구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9) 裴京漢, 앞의 논문(2006), pp.106-107 ; 王克文, 앞의 논문, pp.103-104.

이후 풀려날 때까지 17개월 동안 투옥되면서 그야말로 ‘혁명가의 결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특히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의 汪精衛는 『民報』에의 활발한 기고를 통해 당시 본격화된 立憲派와의 논쟁에서 주역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 그가 발표한 논설은 당시 革命派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서는 이 시기 그가 발표한 논설을 통해 汪精衛가 보여준 革命論의 특징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汪精衛의 사상은 우선 『民報』 제1·2기에 실린 최초의 논설 「民族的國民」에서부터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그 전체 내용으로 보아 嚴復이나 康有爲·梁啓超 등의 革命反對論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이 분명하다. 그는 우선 “민족주의가 장차 우리 種族을 충분히 강하게 할 것인가?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 嚴復을 비판하면서 “同氣類가 계속되는 人類團體”로서의 ‘민족’의 경우, “한 민족은 주인의 지위에 서고 다른 한 민족은 노예의 지위에 선다. 무릇 누가 달게 노예가 되고자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내세우는 민족주의의 목적은 노예가 아닌 주인의 자리라고 하여 滿洲族의 중국 지배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¹⁰⁾

이러한 汪精衛의 ‘民族主義’에는 사실상 강력한 漢族中心(또는 優越)主義의 색채가 넘쳐나는 것이 사실이다. “4천년 동안…실로 우리 민족이 주인의 지위에 있어 오지의 다른 민족은 실로 모두 우리 품에 안겨 안정된 지 오래였고, 결국 하나로 동화되어 4억의 대민족을 이루었다. 오호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明이 망한 다음 우리 민족은 이미 두 번째의 지위를 잃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 번째의 지위로 떨어지려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

10) 汪精衛, 「民族的國民」(1), 『民報』 제1호, 1905.10. pp.6-7(『民報』의 페이지는 1957年 科學出版社影印本の 페이지를 따랐다). 汪精衛, 『汪精衛集』 제1권(上海, 1929), pp.6-7.

다.11) 아울러 이 글에서 汪精衛는 “마치 말과 소가 서로 아무런 상관 없이 있는 것처럼”, “滿洲族과 우리는 族類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12) ‘東胡賤族’·‘한 줌의 毳裘를 입은 야만인’·‘犬羊과 같은 賤種’·‘천박한 오랑캐(賤胡)’라는 모멸적인 용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滿洲族을 “신명스러운 혈통의 후예(神明之胄)”인 漢族과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저 滿洲라는 것은 明朝에 대해서는 易姓이지만, 중국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실로 亡國滅種의 원수”라고 지목하면서, “지금의 정부는 이민족의 정부이다. 우리 族類가 아니면 그 마음은 필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자신의 族類가 고립되어 우리의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농락하려는 것인데, 왜 이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가 터키의 압박을 받으면 자신의 독립을 추구할 뿐이지, 터키 정부의 입헌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연결된다.13)

이러한 “滿洲政府의 立憲說은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귀화시키려는 하나의 묘책이지만 그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사실상 康有爲와 梁啓超 등 立憲派의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그는 “排滿으로 민족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立國으로 국민주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고 革命派의 입장을 정리하였다.14) 특히 그는 排滿을 강조하는 革命派와는 달리 滿·漢의 同화와 他民族에 대한 包容을 내세우면서 “滿洲民族 내지 蒙·苗·回·藏 諸民族을 융합해서 建國”할 것을 제안하는 立憲派의 ‘大民族主義’(국내 본토와 藩屬의 민족이 힘을 합쳐 국외의 諸民族에게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워, “국내 다른 민족은 우리에게 동화된 지 오래이다. 어디 또 다른 본토나 藩屬의 민족이 있다는 말인가? 지

11) 汪精衛, 앞의 글, p.9.

12) 위와 같음.

13) 汪精衛, 앞의 글, p.21과 p.25(『汪精衛集』 1, p.20, pp.24-25. 이하 동일).

14) 汪精衛, 앞의 글, pp.26-29(pp.26-29.).

금 민족주의를 내세워 滿洲에 대항한다면, 滿洲가 무너진 다음 몽골도 뒤따라 정복될 것이고, 同化力으로 흡수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면서, “민족주의를 실행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민을 이루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물론 (漢族中心主義的) 민족주의의 강렬한 긍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혁명’만이 아닌 ‘정치혁명’을 통해 滿洲族의 타도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건설까지 함께 지향하는 시각을 확실하게 제시하기 위해 ‘국민주의’의 추구를 또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주의를 세우면 귀족정치를 전복시킬 수 있지만 결코 君權 전제정치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이 단지 민족주의만 안다면, 君權 전제정치는 털끝만치도 훼손되지 않거니와, 明이 元을 대신한 것처럼 종족계에 변동이 생길 뿐 정치계에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하지만 그 기초는 민족주의에 의해 동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60년 이래의 귀족정치를 전복하려면 옹당 민족주의를 세우야 하고, 6천년 이래의 君權 전제정치를 전복하려면 옹당 국민주의를 세우야 한다.”¹⁶⁾

이것이 바로 그의 결론이다. 孫文이 집중적으로 제시해온 ‘反滿共和

15) 汪精衛, 앞의 글, pp.30-31.(pp.29-30). 이렇게 反滿을 강조하는 革命論이 혁명 이후 건설된 民主共和國의 청사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展望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金衡鍾, 『清末 革命派의 ‘反滿’革命論과 ‘五族共和論』, 『中國現代史研究』 12, 2001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滿洲族이나 기타 蒙·回·藏·苗族 등 諸民族의 向方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검토의 부족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中國同盟會의 강령에 포함되는 ‘驅除韃虜’를 실제 革命을 통해 이룬 다음에, 만주족을 포함한 蒙·回·藏·苗族에 대한 대우나 처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革命派는 아주 단편적인 고려의 흔적밖에 남기지 않고 있다. 이점은 汪精衛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6) 汪精衛, 『民族的國民』 (2), 『民報』 제2호(1905. 11), pp.17-18(p.47).

革命'論의 논리¹⁷⁾를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답습하면서, 汪精衛는 이후 立憲派와의 논쟁에서 革命派를 대변하는 주역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駁新民叢報最近之非革命論」(『民報』 제4호)에서 그가 梁啓超의 開明專制論을 비판하면서 “政治革命을 하지 않으면 立憲을 할 수 없고”, “種族革命을 하지 않으면 立憲을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논거로 “立憲을 하고자 한다면 혁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혁명은 立憲制度를 건립하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¹⁸⁾ 「再駁新民叢報之政治革命論」(『民報』 제6호와 제7호)에서 “『新民叢報』의 뜻은 君主立憲은 정부의 開明專制로 이를 수 있고, 民主立憲은 국민혁명으로 이루는 것인데, 滿洲人是 믿지만 漢人是 믿지 못하고, 정부는 믿지만 국민은 믿지 못하는 까닭에 君主立憲을 이야기한다”고¹⁹⁾ 비판하는 논리는 그러한 점을 잘 보여 준다. 실제 汪精衛가 『民報』 26期를 통틀어 발표한 논설은 31편이나 되었다. 두 차례 나누어 연재한 적도 많아 1-13期の 경우에만 14편을 발표하였으며, 전체 회수로만 따진다면 『民報』의 主筆을 지내기도 하였던 章炳麟의 51편에 다음가는 두 번째의 차례(胡漢民과 함께)였을 뿐만 아니라, 孫文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孫文이 구술하고 汪精衛가 집필을 하여 그의 극찬을 받기까지 한 경우(「駁革命不致召瓜分說」)도 있었다.²⁰⁾

17) 金衡鍾, 「清末 革命派의 '反滿'革命論과 '五族共和論'을 참조. 또한 '排滿'論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王春霞, 「'排滿'與民族主義」(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18) 汪精衛, 「駁新民叢報最近之非革命論」, 『民報』 제4호, pp.12-13(『汪精衛集』에 실려 있지 않은 논설의 경우 『民報』의 페이지만 제시한다).

19) 汪精衛, 「再駁新民叢報之政治革命論」, 『民報』 제6호-제7호. 특히 제7호의 p.54.

20) 趙矢元·田毅鵬, 「辛亥革命時期的孫中山和汪精衛」, 『社會科學戰線』 1986-4, pp. 181-182. 饒懷民, 「試論民報時期汪精衛的民族主義思想」, 『華中師院學報』 1981-4, p.13, p.17. 『民報』에 나타난 汪精衛의 民族主義에 대해서 楠瀬正明, 「辛亥革命期における汪精衛の'國民主義」, 『史學研究』 152, 1981는 비록 國民의 意力이나 實力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汪精衛의 國民主義는 '國民의 創出'이 缺如된, 따라서 부르조아革命思想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하고

하지만 革命派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등장한 汪精衛가 立憲派와의 논쟁에서 가장 공을 들여 논박해야 했던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른바 ‘革命瓜分論’에 대한 비판이었다. ‘革命瓜分論’은 대체로 革命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내란이 생겨 列強에 의한 개입·간섭과 궁극적으로 중국의 瓜分을 불러와 도리어 亡國滅種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논리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²¹⁾ 이런 革命反對論者들의 주장은 “억측으로 위협하는 말을 가지고 국민을 험박하여 바야흐로 새로워지는 국민의 기상을 시들게 하니…그 流毒이 퍼지는 바가 적지 않다”고 汪精衛 스스로도 그 파괴적인 위력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²⁾

이에 대한 汪精衛의 반론의 요점은 “지금 밖으로 중국에 대한 각국의 방침을 살펴보고, 안으로 국민의 실력을 헤아려보면…혁명과 瓜分은 결코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는 것이었다.²³⁾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국민의 실력에 대한 인식이 전체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瓜分の 원인은 중국이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립하지 못하면 세계의 평화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甲午(淸日戰爭) 이후 庚子(義和團事件) 이전은 瓜分說이 가장 치열하였던 시대이지만, 庚子 이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開放門戶·保全領土說이 확정된 시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瓜분에 이르지 않은 것은 列國의 均勢平

있다.

- 21)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金衡鍾, 「辛亥革命에서의 反帝問題의 認識과 實踐-‘革命瓜分論’과 革命派의 對應-」, 『東洋史學研究』 30, 1989를 참조할 수 있다. 본고는 이 논문에 대한 일종의 補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2) 汪精衛, 「駁革命可以召瓜分說」, 『民報』 제6호, p.17. 이것은 제목을 달리 하여 汪精衛, 「革命決不致召瓜分說」, 『汪精衛集』 제1권(上海, 1929), pp.99-121에도 실려 있다.
- 23) 汪精衛, 「駁革命可以召瓜分說」, 『民報』 제6호, p.17(p.96).

均主義의 결과이다.²⁴⁾

각국이 瓜分主義에서 일변하여 開放門戶·保全領土主義로 옮긴 것은 滿洲 정부가 능히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첫째는 각국 사이에 勢力平均을 유지하는 것, 둘째는 우리 국민의 사정을 알고 瓜分이 행해지기 어려움을 실제 염려하기 때문이다.²⁵⁾

이러한 주장은 1902년 이래 시작된 革命瓜分論을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고, 특히 1903년 당시 孫文이 革命瓜分論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과도 아주 유사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孫文은 이미 1903년에 東京의 유학생잡지인 『江蘇』에 「支那保全分割合論」을 발표하여 서구인의 中國保全論과 일본인의 中國分割論을 논평하면서 “國勢에 대해 논한다면 보전될 이유가 없으나 民情에 대해 논한다면 분할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義和團의 예를 들어 중국 인민은 鄉族과 身家를 보위하기 위해 萬死를 무릅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중국의 분할, 즉 瓜分을 저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는 또한 “혁명이야말로 중국을 국제교섭이라는 현재의 참담한 지위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法門”이라고도 지적하였다.²⁶⁾

이렇게 列強의 領土保全論과 勢力均衡에 국민의 실력(意力)이 더해지면 瓜分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汪精衛가 보기에 문제는 滿洲 정권에게 있었다. 그리고 “瓜分の 原因은 自立하지 못하는데 있는데, 自立하지 못하는 原因은 滿洲人이 政권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며”, “滿洲 정부가 하루라도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

24) 汪精衛, 「駁革命可以召瓜分說」, 『民報』 제6호, p.18(p.100).

25) 汪精衛, 위의 글, p.21(p.103).

26) 孫文, 「支那保全分割合論」,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室等編, 『孫中山全集(中華書局, 1981)』 제1권. pp.218-224.(原載 『江蘇』 제6기 1903.9); 孫文, 「在檀香山正埠荷梯厘街戲院的演說」(1903.12.13) 『孫中山全集』 제1권. p.226; 金衡鍾, 앞의 논문(1989), p.147.

은 하루라도 自立할 수 없으니 瓜分의 원인은 하루라도 그치지 않는다”27)는 주장 역시 앞서 孫文이 제시한 바 있었다.

한편 汪精衛는 나아가 革命軍이 일어나면 外人이 간섭하여 瓜分이 그 뒤를 따른다는 주장의 근거 일곱 가지를 한데 모아 ‘섬멸’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행히 外人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간섭을 받을 원인이 없다고 지적하고,28) 나아가 “革命軍이 스스로 간섭을 부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혁명의 목적인 排滿은 排外가 아니므로” “혁명군이 스스로 간섭을 부른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친 염려”라고 반박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염려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급무는 바로 (排外로 먼저 外人의 간섭을 부르게 될 - 인용자) 자연적 폭동을 개량하여 진화시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주의와 국민주의를 보급하여 국민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문명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우리의 천직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공동의 목적을 정하고 질서적 혁명을 수행한 다음 救國의 목적을 결국 달성할 수 있다.29)

이렇게 되면 “혁명은 瓜分의 禍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瓜分을 부르는 것이 아니므로” ‘談虎變色’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30) 이러한 汪精衛의 反論은 쉽사리 약점을 드러낸다. 그의 주장이 현실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열강의 영토보전주의와 세력균형, ‘국민’의 실력과 의지, ‘자연적 폭동’의 ‘질서적 혁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였으며, 그 이전에 혁명의 통제권을 革命黨(혁명군)이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가정도 달려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27) 汪精衛, 위의 글, pp.19-21(pp.100-103).

28) 汪精衛, 위의 글, pp.24-31(pp.106-115).

29) 汪精衛, 위의 글, pp.34-36(pp.117-118).

30) 汪精衛, 앞의 글, pp.38-39(p.120).

처음부터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이었으며, 이후 실제 辛亥革命의 진행과정이 처음부터 革命黨의 통제나 조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武昌蜂起에서부터 선명하게 나타난다.

革命派의 반론에 내재된 이러한 약점이 결국은 초기부터 革命派가 革命瓜分論의 설득력과 파괴력에 주목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의 자세나 논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을 해도 망하고 혁명을 하지 않아도 망하는 것”이므로 “매국적인 舊政府를 革去하고 救國할 수 있는 新政府를 건설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瓜分の禍를 면하려면 혁명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호소뿐이었다.³¹⁾ 汪精衛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동남아에서 계속된 논쟁에서도 “反對黨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민족·민권의 대의를 깊이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또한 왕왕 대외적 곤란을 구실로 탄식하고 둘러보면서 감히 혁명의 과업에 찬동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革命瓜分論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결국 혁명의 문제는 ‘利害’의 문제가 아니라 ‘是非’의 문제임을 인정하였다.³²⁾ 이것은 그가 페르시아혁명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儉安苟活’보다는 ‘모험이 낫다’고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³³⁾ 중국의 내외환경으로 보면 立憲派의 지

31) 金衡鍾, 앞의 논문(1989), p.145.

32) 汪精衛, 「申論革命決不致召瓜分之禍」(原載, 中興日報, 1908.7.28), 『汪精衛集』 1, pp.123-124를 참조. 章開沅 等主編, 『辛亥革命史料新編』 제5권(湖北人民出版社, 2006)에는 동남아에서 각기 立憲派와 革命派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인 『南洋總匯新報』와 『中興日報』의 논설을 다수 수록하고 있으나, 이 글과 汪精衛, 「革命可以杜絕瓜分之實據」, 『中興日報』(1908.8.27-9.30), 『汪精衛集』 제1권(上海, 1929), pp.171-196은 유감스럽게도 실려 있지 않다. 『南洋總匯新報』의 「駁<<中興報>>論革命不致召過分之禍」(1908.8.18-26), pp.22-28)나 精衛, 「正告欲爲駁論者」, 『中興日報』(1908.8.24), pp.335-337. 여기서 「申論革命決不致召瓜分之禍」라는 글제목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汪精衛의 다른 글들도 꼭 실려 있다.

33) 汪精衛, 「波斯革命」, 『汪精衛集』 제1권. p.208.

적이 사실 맞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모험적으로라도 떨쳐 일어나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경론이 그 본질이었고, 여기에 바로 革命派가 立憲派의 주장을 완전히 패퇴시키지 못한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汪精衛의 논리가 무엇보다도 孫文의 논리를 충실히 재현한 것이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汪精衛가 뒤이어 『民報』 제9호에 발표한 「駁革命可以生內亂說」과 같은 경우, 種族革命과 政治革命 외에 “社會革命을 말하자면 國家民生主義를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불완전한 사회경제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그 수단이다”라고³⁴⁾,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孫文의 三民主義思想(특히 民生主義)을 곧바로 내용에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汪精衛의 革命論에 내재된 약점은 동시에 孫文, 나아가서는 革命派 전체 사상적 약점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 한가지 그의 革命論에서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그의 民族論이다. 그의 革命論에 漢族中心主義的 시각이 두드러진 것은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민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研究民族與政治關繫之資料」(『民報』 제13호, 1907)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다. “민족 동화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반드시 漢族이 모범이 되고, 다른 민족이 이에 점차 醇染되는 것이어야 한다”³⁵⁾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나아가 “漢人이 民主國體를 창설하고 滿洲 정부를 박멸한다면, 혁명을 할 때 蒙·回·藏 여러 민족이 반드시 때를 틈타 끈을 풀고 각기 분리 독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에 대해서도 「擊破」를 시도하고 있다. 그 반론의 근거는 排滿이 排蒙·排回·排藏으로 연결되지 않고, 漢人이 蒙·回·藏의 분리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³⁶⁾

34) 汪精衛, 「駁革命可以生內亂說」, 『民報』 제9호, pp.27-28.

35) 汪精衛, 「研究民族與政治關繫之資料」, 『民報』 제13호 1907, p.31.

36) 汪精衛, 「研究民族與政治關繫之資料」, 『民報』 제13호 1907, pp.32-33.

이렇게 蒙·回·藏의 분리 독립을 근거로 瓜分이 초래된다는 독특한 시각을 내세운 것은 뒤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바로 楊度였으므로, 汪精衛의 비판은 물론 그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양자의 공통성이다. 혁명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양자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蒙·回·藏인은 오늘날 반드시 漢人과 평등하게 함께 의원을 선거하고 함께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보면서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나 “漢人は 蒙·回·藏의 분리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양자 모두 동의하기 때문이다.³⁷⁾ 그리고 이 공통성이 바로 이후 양자의 共濟會에서의 활동에 일종의 정신적·사상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汪精衛의 民族論이 주목할 만한 하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³⁸⁾

37) 漢族의 우위와 정치 권력에서의 주도권 장악, 漢族에 의한 기타민족의 동화라는 漢族中心主義의 사고에서 汪精衛나 梁啓超·楊度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孫宏運, 「1905-1907年汪精衛·梁啓超關於種族革命的論戰與伯倫知理<<國家學>>的關係」, 『學術研究』 2002-6나 孫宏運, 「汪精衛·梁啓超關於‘革命’的論戰的政治學背景」, 『學術研究』 2004-5은 汪精衛와 梁啓超가 논쟁 당시 학술적 근거로 사용하였던 J. K. Bluntschli의 『國家學』 등 서구적 사상의 자원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 등 중요한 개념과 논리가 대부분 여기서 나왔으므로, 그들의 革命論·立憲論의 많은 부분에서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도 어찌된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8) 楊度뿐만 아니라 같은 立憲派이면서 立憲思想·運動에 대해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梁啓超의 사상도 清末·辛亥革命期の ‘民族論’ 내지는 ‘中華民族’ 개념의 제창 문제를 다룰 경우 절대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董方奎, 『梁啓超與立憲政治』(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1); 張灝(Chang Hao), 『梁啓超與中國思想的過渡(1890-1907)』(江蘇人民出版社, 1995) 등 梁啓超의 사상 자체에 대한 수많은 傳記를 제외하더라도 黃興濤, 앞의 논문; 馬先彥, 앞의 논문; 郝時遠, 「中文‘民族’一詞源流考略」, 『民族研究』 2004-6; 李國棟, 앞의 논문(2007); 李喜所, 「中國現代民族觀念初步確立的歷史考察」, 『學術月刊』 38-2, 2006; 李國棟, 「清末民初民族問題與邊疆危機-以蒙古·西藏·新疆地區爲例」, 『烟臺大學學報』 19-4, 2006; 李喜所, 「利殖與流變: 近代中國的民族主義」, 『天津師範大學學報』 191, 2007-2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Frank

II. 辛亥革命期 楊度の 民族論과 立憲君主制論

湖南省 湘潭 출신의 楊度(1874-1931)가 20세에 과거시험에 舉人으로서 합격한 다음 湖南省의 저명한 학자 王闓運에게 배우면서 특히 그의 ‘帝王學’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그의 일생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음은 흔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이후 그는 1902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弘文學院에 입학하면서 서구사상에 광범위하게 접촉하였으며, 1904년에는 法政大學의 留學生法政速成科에 들어가 汪精衛 등과 함께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1907년 이후 國會速開運動을 주창하고, 뒤이어 귀국한 다음 清朝의 官僚로 憲政編查館에 재직하고 立憲運動이나 國會請願運動에 종사하면서 같은 立憲派인 梁啓超 등과 행동을 달리하는 독자노선을 걸었던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는 革命派와도 분명히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상태였다. 孫文과 사흘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滿·漢·中·外, 革·保의 利病’에 대해 논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결국 “선생의 高論에 감복하지만 憲政에 투신한지 오래되어 갑작스럽게 바꾸기 어렵다”면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뜻을 밝혔던 것이다.³⁹⁾

일본의 저명한 교육가 嘉納治五郎과의 담화록을 스스로 정리하여 발표한 기록에 의하면, 그는 滿洲人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嘉納

Dikötter, *The Discourse of Race in Moder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楊立花譯, 『近代中國之種族觀念』, 江蘇人民出版社, 1999); 陶緒, 『晚清民族主義思潮』(人民出版社, 1995); 松本ますみ, 『中國民族政策研究 - 清末から1945年までの民族論を中心に -』(多賀出版, 1999); 王柯(김정희 옮김), 『민족과 국가-중국다민족통일국가사상의 계보』(동북아역사재단, 2005); 李曉東, 『近代中國의 立憲構想-嚴復·楊度·梁啓超と明治啓蒙思想』(法政大學出版局, 2005); 王春霞, 『排滿與民族主義』(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李華興 等, 『索我理想之中國- 中國近代國家觀念的形成與發展』(安徽教育出版社, 2005); 鄭大華 等編, 『中國近代史上的民族主義』(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등의 연구에서도清末 이래의 ‘민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39) 楊度, 『與孫中山의 談話』(1905), 劉淸波主編, 『楊度集』(湖南人民出版社, 1986), p.189.

治五郎에 대해 “支那는 滿洲의 臣僕인 까닭에 거의 각국의 臣僕의 臣僕이 되어 있으며, 滿洲를 主人으로 받드는 까닭에 거의 각국을 主人의 主人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支那는 滿洲에게 직접적인 主僕關係에 있고, 각국과는 거의 간접적인 主僕關係에 있습니다”고⁴⁰⁾ 하여 淸朝의 중국 지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 점에서는 淸朝를 ‘洋人の 朝廷’이라 비난하였던⁴¹⁾ 革命派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품었고, 그래서 ‘격렬한 방법’이나 ‘소동’을 통한 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⁴²⁾

그래서 嘉納治五郎이 인민의 ‘소동’에 대해 外人이 간여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같은 대세에서 어찌 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진보가 가능하다면 국민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선생의 말씀대로 국민이 있으면 外人의 간섭 또한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국민이 없다면 안으로 소동이 없고 밖으로 간섭이 없더라도 어찌 自治가 가능하다고 할 수겠습니까?... (하지만) 나라가 이와 같으니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찌 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따라서 나는 장래 국민의 진보를 통해 독립하고 自尊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소동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설사 일이 성공하지 못해 안에서 꺾이고 밖으로부터 억압을 받는다고 해서 역시 亡國으로 나가는데 지나지 않고, 다른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마찬가지이니, 이것을 아는 사람은 外人의 간섭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⁴³⁾

40) 楊度, 「支那教育問題」(1902), 劉晴波主編, 『楊度集』(湖南人民出版社, 1986), p.63. 이 글은 『新民叢報』 제23, 24호에 실린 것이기도 하다.

22) 陳天華, 「猛回頭」, 中國史學會主編, 『辛亥革命』 제2책(上海人民出版社, 1981), pp.151-152.

42) 楊度, 「支那教育問題」, p.47, pp.59-60.

43) 楊度, 위의 글, p.60. pp.52-53의 내용 역시 이와 관련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革命瓜分論에 대하여 ‘국민’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利害’보다는 ‘是非’라고 한 汪精衛의 논조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혁명에 동조하는 듯한 이러한 그의 ‘급진적’인 주장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서술한 대로 그는 革命派와는 분명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이후 발표한 여러 글에서 아주 분명한 윤곽을 가지고 제시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그의 立憲君主制論과 民族論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첫째 楊度가 지닌 사상의 핵심은 중국의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과 독자적인 이해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民族論은 그의 立憲論·革命反對論의 출발점이자, 중착점이다. 그것은 滿·漢의 대립을 가져올 혁명은 蒙·回·藏 등 清朝 치하의 타민족이 분리 독립을 하도록 이끌고, 이것은 결국 그 지역이 영국과 러시아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帝國主義列強이 세력균형을 위해 중국 본토에 대한 瓜分에 나설 것이며, 그 결과 중국은 亡國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 줄거리이다. 이를테면 1907년 발표한 「<<中國新報>>敍」는 그의 관점을 집약적인 형태로 가장 잘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 중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단지 君主立憲만 가능하지 民主立憲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理)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勢)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民主立憲을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滿·蒙·回·藏인의 文化가 짧은 시간 안에 漢人과 동등해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漢人의 병력이 짧은 시간 안에 滿·回·藏에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共和國民은 헌법상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滿·蒙·回·藏人は 바야흐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국가관념이 아

주 천박하므로 漢人과 병립하여 五族이 평등을 누리고 함께 의원을 선거하고 함께 대통령을 선거하기를 바란다면, 이 일은 장래에는 장차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므로 漢人이 共和國家를 조직하면 滿人은 더 이상 지킬 토지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반항하다가 敗滅할 것입니다. …蒙·回·藏은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漢人과 더불어 한 국가, 한 정부 아래 같이 서서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반드시 이를 틈타 사슬을 벗어나 각기 분리·독립하려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漢·蒙·回·藏 4족은 나뉘어서 4개의 작은 중국이 될 것입니다. 이 4개의 작은 중국 가운데 시종일관 立國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漢人뿐이고, 蒙·回·藏은 모두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어느 하나가 立國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強國에게 병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이 제창하는 중국의 영토보전과 각국의 勢力均等主義는 반드시 파괴되고, 각국의 분쟁을 낳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瓜分이란 원인 때문에 외부에 의한 瓜分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민주국가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결과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 立憲을 하자면 현재의 君主立憲制가 적당하며, 漢·滿 평등, 蒙·回 동화로 국민통일의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國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體에 있으며, ‘主’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憲’을 다투는 것입니다.⁴⁴⁾

楊度が 여기서 내세우는 “내부적인 瓜分이란 원인 때문에 외부에 의한 瓜分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 논리구조는 革命瓜分論의 전형적인 논조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이야기되는 革命瓜分論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경우 革命軍과 淸朝의 전쟁이나 傳統王朝 성립기의 群雄割據와 같은 경쟁이 ‘자연적 폭동’이나 장기적 내란을 낳고, 이것이 列強의 기존이익을 침범하고 세력균형을 무너뜨려 열강의 개입과 그로 인한 瓜分으로 이어진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⁴⁵⁾

44) 楊度, 「<<中國新報>>敍」(1907.1.20), 『楊度集』, p.210.

그런데 楊度는 내란의 원인으로 群雄割據나 革命戰爭 대신 중국 邊疆民族의 분리 독립을 가장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그의 革命瓜分論에 독특한 지위를 부여해준다. 사실 ‘大民族主義’와 ‘中華民族’論을 제기하면서 革命瓜分論을 통해 革命派의 排滿革命에 반기를 들었던 立憲派의 거장 梁啓超에게서도 이러한 관점은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앞서 잠깐 보았듯이 이와 같은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漢族 우위와 滿·漢 평등, 타민족의 동화만 언급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革命派와 비교한다면 楊度가 당시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해 훨씬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세력 균형에 대해서도 孫文·汪精衛 등의 革命派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실제 辛亥革命의 발발 이후 진행된 역사적 과정은 楊度の 예견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⁴⁶⁾

또한 楊度가 “이것은 이치(理)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勢)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⁴⁷⁾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은 革命瓜分論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결국 혁명의 문제는 ‘利害’의 문제가 아니라 ‘是非’의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儉安苟活’보다는 ‘모험이 낫다’고 하였던 汪精衛의 입장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楊度는 ‘勢’로 보아 民主立憲이 아닌 君主立憲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였는데, 汪精衛는 ‘利害’보다는 ‘시비’를 따져 民主立憲을

45) 이에 대해서는 金衡鍾, 앞의 논문(1989)을 참조.

46) 이를테면 金衡鍾, 앞의 논문(1989); 李國棟, 「清末民初民族問題與邊疆危機- 以蒙古·西藏·新疆地區爲例」, 『烟臺大學學報』 19-4, 2006 등을 참조. 또한 여기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辛亥革命과 中華民國 성립을 전후한 시기의 ‘五族共和’ 문제와 革命派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金衡鍾, 「清末 革命派의 ‘反滿’ 革命論과 ‘五族共和論」, 『中國現代史研究』 12, 2001; (日)村田雄二郎, 「孫中山與辛亥革命時期的五族共和論」, 『廣東社會科學』 2004-5 등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47) 楊度, 「<<中國新報>>紋」(1907.1.20), 『楊度集』, p.210.

위한 혁명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양자의 차이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楊度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淸朝의 관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상황으로 따지자면 滿·漢·蒙·回·苗·藏 各族이 합쳐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統御하여 함께 다스리는 것은 우리 大清朝廷입니다. 君權이 통일되지 못한다면 전국은 반드시 瓜分에 이를 것이고, 몽골은 반드시 러시아에게, 티베트는 반드시 영국에게 돌아갈 것이며, 21行省은 반드시 各國이 나누어 갖는 바가 되어 갈라지고 흩어져 同歸於盡에 이를 것이므로, 반드시 各族을 합하여 一尊(즉 淸朝)을 통일해야만 능히 瓜分의 禍를 피할 수 있습니다.”⁴⁸⁾

滿·漢·蒙·回·藏에 苗族까지 합친 各族을 統御하는 淸朝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君主立憲이 필요하다는 그의 논점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君主立憲論者이면서도 그와 梁啓超는 국민의 수준 즉 ‘民度’를 평가하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양자의 정치적 선택을 갈라놓았다. 楊度는 “국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의 多寡는 君主立憲이나 民主立憲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얻는 행복의 多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헌법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누가 주가 되느냐(民主냐 君主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⁴⁹⁾라고 하면서 “나의 지론이 귀하와 다른 점은 내가 君主立憲과 民主立憲은 高下를 나누기 어렵고, 단지 그 나라의 政勢에 따라서 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약 중국의 경우라면 (民主國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원인은 漢·滿·蒙·回·藏 五族이 분립할 수 없다

48) 楊度, 「憲政實行宜定宗旨敬陳管見摺」(1908.4), 『近代史資料』 제71호, 1988. p.231.

49) 楊度, 「<<中國新報>>鈞」(1907.1.20), 『楊度集』, p.210. 또한 楊度, 「支那教育問題」, pp.60-61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楊度의 이런 관점은 상당히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점 때문이지, 人民程度의 不足이 원인은 아닙니다.”⁵⁰⁾라고 梁啓超의 ‘民度’論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梁啓超와는 달리 도리어 국민의 분발을 강조한다.

立憲 문제는 정부에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 국민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따라서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오로지 責任政府로 개조하는 것이 유일한 과업입니다. 그리고 責任政府로 개조하는 방법에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인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만약 한 나라에 이 기관이 없다면 정부가 責任政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오늘날 이것을 가장 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책임 있는 인민이 책임 있는 政府로 개조하는 것이 바로 政治革命입니다!⁵¹⁾

결국 인민의 程度를 따지려면 중국 인민의 程度와 중국 정부의 程度를 비교해야 하지, 다른 나라 인민의 程度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民度論’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 楊度가 “滿·漢이 평등해지고 蒙·回가 동화된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바인데, 국회를 개설한다는 것 역시 천하에 호소할 수 있는 내가 든 간단한 방법이다. 나는 중국의 모든 문제는 모두 ‘국회 개설(開國會)’이라는 세 글자로 해결될 수 있으며, 즉 滿·漢 평등과 蒙·回 동화 역시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⁵²⁾고 하면서 제창한 ‘國會速開論’이 이후 立憲運動의 방향을 틀어놓게 되었고, 梁啓超 역시 기존의 ‘民度論’을 수정하면서 이러한 방향에 동참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⁵³⁾

그리고 楊度の 이러한 君主立憲 사상은 1907년 전반기에 그가 발

50) 楊度, 「致<<新民叢報>>記者」(1907.4), 『楊度集』, p.401.

51) 楊度, 「<<中國新報>>敍」(1907.1.20), 『楊度集』, pp.211-212.

52) 楊度, 「金鐵主義說」(1907.1-5), 『楊度集』, p.371.

53) 이를테면 李曉東, 앞의 책, 제3장과 제4장; 侯宜杰, 「二十世紀初中國政治改革風潮」(人民出版社, 1993), pp.178-215를 참조.

표한 「金鐵主義說」(《中國新報》 1907.1-5號)이란 긴 논설에서도 확대되어 재생산되었다.⁵⁴⁾

각국이 영토보전을 원하지만 여의치 않아 부득불 대세를 따라 瓜分政策으로 나선다면, 중국은 비록 이를테면 인도나 이집트나 조선과 같은 無形의 亡國을 바란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며, 오로지 四分五裂된 폴란드처럼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에서 五族分立論을 제창한다면...몽골과 위구르는 러시아에 들어가고 티베트는 반드시 영국에 들어가며 滿洲는 반드시 일본에 들어가고, 黃河 유역은 반드시 독일에 들어가고, 雲南·貴州 지역과 兩粵 지역은 반드시 프랑스에 들어가게 된다. 長江 류역은 반드시 영국에 들어가고 河北 일대는 독일에 들어가며 분리한 네 나라는 동시에 함께 망하고 중국도 아주 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국의 均勢政策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은 오늘의 세계에서 漢·滿·蒙·回·藏의 토지 가운데 어느 일부도 잃어서는 안 되며, 漢·滿·蒙·回·藏의 인민 가운데 어느 종족도 잃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토지가 종전과 같아야 하고, 인민이 종전과 같아야 하고, 통치권도 종전과 같아야 한다. 삼자 가운데 어느 하나도 변동이 있게 해서는 안 되며, 일단 변동이 생기면 중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오늘날의 중국 國形은 변해서는 안 되며, 國體도 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政體만 변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⁵⁵⁾

결국 楊度는 近代國民國家의 기본요소인 영토(토지)와 민족(종족)·주권(통치권)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변동이 생기면 중국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國民國家의 창출, 그것을 위한 기존 영토와 민족·주권의 보전이 바로 楊度の 정치사상에서 핵심적 바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共濟會가 해체된 다음 그가 대신 共和

54) 楊度, 「金鐵主義說」(1907.1-5), 『楊度集』, pp.213-397.

55) 楊度, 「金鐵主義說」(1907.1-5), 『楊度集』, pp.303-304.

促進會를 받기하면서 “한 나라를 가지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능히 救國을 할 수 있다면 君主立憲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시골의 고리타분한 선비가 말하는 君臣大義라는 가, 滿·漢 감정이 독특하게 남과 달라 특별히 그들을 떠받들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 것도⁵⁶⁾ 아마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五族을 합하여 一家를 이루고 힘을 합쳐 밖으로 향하게 한다면 반드시 충분히 넓은 영토와 수많은 인민을 거두기에 충분할 터이며, 중국은 세계에 우뚝 서는 웅대하고 장엄한 經濟戰爭國이 될 것”⁵⁷⁾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排滿과 民主立憲을 지향하면서 국민의 意力を 믿고 列強의 세력균형과 領土保全論에 의지하여 혁명을 지향하던 革命派나, 中華民族論의 선구적 제창자이면서도 滿·漢 문제 이외의 타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하였던 梁啓超 등의 立憲派와 대비되는 楊度の 이러한 立憲論·國民國家論은 당시 중국의 현실적 정치상황에 대해 가장 문제의 본질에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滿·漢 평등과 蒙·回 동화를 강조하면서 근대적 國民國家의 건설을 지향하는 楊度の 입장은⁵⁸⁾ 사실상 앞서서 다루었던 汪精衛의 그것과 결국 비슷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汪精衛(또는 革命派) 역시 漢族이 주도권을 잡고 다른 민족을 동화시키는 共和國家를 구상하고 있었음은 앞서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楊度나 汪精衛는 革命運動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또는 排滿과 ‘種族革命’의 문제)만 제외한다면 그다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지점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56) 楊度, 「復黃光焯陸廉欽書」(1912.2.4), 『楊度集』, pp.544-546.

57) 楊度, 「金鐵主義說」(1907.1-5), 『楊度集』, p.305.

58) 王春霞, 「‘排滿’與民族主義」(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는 이런 점에서 楊度の 사상을 아예 ‘國家主義’로 규정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상당히 핵심을 지직한 논리라고 하겠다(pp.180-201).

다(다음에 서술할 共濟會의 宣言書에서도 비슷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점은 革命派와 立憲派 일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武昌蜂起 이후 辛亥革命의 전개에 의해 共和制 국가의 성립이 가시화된 1911년 11월의 시기가 되면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다만 남은 것은 어쩌면 정치적 파벌 사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투쟁뿐이었다.

III. 1911년의 汪精衛·楊度와의 國事共濟會

1911년 10월 10일 武昌蜂起 이후 辛亥革命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1월 6일 清朝의 司法大臣 紹昌 등의 奏請에 의해 ‘詔赦黨人’ 조치의 일환으로 汪精衛는 동료인 黃復生, 羅世勳과 함께 석방되었다.⁵⁹⁾ 사흘 후 袁世凱가 北京에 도착하여(11월 13일) 總理大臣으로서 취임하여 내각을 조직하게 된 직후인 11월 15일, 汪精衛는 君主立憲論者이자 당시는 袁世凱의 심복으로서 알려진 새 내각의 學部副大臣 楊度和 함께 공동발기인이 되어 天津에서 共濟會를 조직하고 그 취지를 밝히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⁶⁰⁾ 물론 그 이전 汪精衛는 北京을 떠나지 않고 袁世凱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59) 汪精衛의 암살 음모와 그 실패 및 옥중 행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汪精衛에 관한 傳記나 연구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黃美眞·李華興, 『辛亥革命前後的汪精衛』, 『辛亥革命時期的歷史人物』(李新任·一民主編, 中國青年出版社, 1983); 劉民山, 『汪精衛在辛亥革命前後的叛變活動』, 『歷史教學』, 1985-4; 蔡德金著, 『汪精衛傳』(四川人民出版社, 1987); 澤田謙, 『敘傳 汪兆銘』(東京, 1940) 등, 그리고 잘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기본사료는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末汪精衛被捕後的供單及其有關史料』, 『歷史檔案』, 1983-2, pp.20-24에 공개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張江裁編, 『汪精衛先生庚戌蒙難實錄』(北平, 1943)에 있지만 여기서 참조하지는 못하였다.

60) 汪精衛는 석방된 직후 북방에서 淸軍의 고위 장교로 활동하던 吳祿貞에게 가서 함께 일하려고 하였는데, 도중에 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北京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통 설명되고 있다. 劉民山, 앞의 글, p.16에서는 袁世凱의 아들 袁克定으로부터 50萬元の 경비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와 袁世凱 사이에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일정한 默契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¹⁾

이 共濟會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立憲 문제가 발생하고서부터 나라가 결국 君主立憲과 民主立憲 양당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君主立憲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의 立國은 滿·漢·蒙·回·藏 다섯 인종이 집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蒙·回·藏인이 漢인과 더불어 한 나라의 정부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滿洲 군주 명의의 羈靡 덕분이다. …그러므로 滿洲 군주가 자리를 내려오는 때는 바로 漢인과 몽골·위구르·티베트가 분리·독립하는 때이다. …그렇게 되면 각국의 領土保全 정책이 파괴되니, … 漢인의 토지 또한 완전해지지 못한다. 영토의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만주·몽골·위구르·티베트의 통일은 현재 군주의 명의를 남겨두지 않으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君主立憲을 주장한다.”

民主立憲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국의 혁명은 君主立憲에 이르러 멈출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군주가 하루라도

61) 汪精衛는 同盟會 회원인 동료 魏宸組와 더불어 며칠 동안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袁世凱에게 ‘共和主義’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張國淦, 『辛亥革命史料』(龍門聯合書局, 1958), p.115. 61)). 胡鄂公, 『辛亥革命北方實錄』(文海出版社, 1970), pp.82-83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지만 汪·魏의 입장 차이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또 雷銘의 『汪精衛先生傳』에 따르면 汪精衛와 袁世凱는 共和政體를 지지한다는 전제 아래 3항의 默契, 즉 (1) 영토의 보전, (2) 國民會議를 통해 停戰과 國體 문제를 결정하도록 운동하는 것, (3)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북방에서는 資政院에 대해서, 남방에서는 武昌政府에 대해 운동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蔡德金, 前揭書, p.51의 再引用), 이점은 共濟會의 활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편 梁啓超와 관련이 있는 立憲派 인사인 羅惇融의 傳聞에 따르면, 袁世凱가 汪精衛와 만나 民主立憲의 반대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滿·蒙·回·藏의 문제”였고, 이것에 의해 汪精衛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은 흥미 있는 점이다(丁文江·趙豐田 編, 『梁任公先生年譜長編』, 上海人民出版社, 1983. p.567). 실제 이 때의 汪精衛도 그러한 점에 충분히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글에서 추구하는 바는 과거 立憲派의 反革命 논리에 가장 완강히 저항하였던 汪精衛의 이러한 ‘굴복’이 종래 일반적으로 革命派의 승리로 간주되었던 양파의 논쟁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재해석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제거되지 않는다면, 憲政은 하루라도 확립될 수 없다. 근본해결의 방법은 오로지 君主制를 民主制로 바꾸는 것이며 滿·漢·蒙·回·藏 5 宗族이 모두 평등하게 共和政府 아래 들어서는 것이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憲政이라 할 수 있다. 결코 政治革命 외에 따로 이른바 宗族革命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오로지 民主立憲을 주장한다.”⁶²⁾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되는 革命派(‘民主立憲黨’)와 立憲派(‘君主立憲黨’)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楊度の 기존 言說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楊度 측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합의보다는 楊度 측의 주도 아래 집필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선언문은 이렇게 양당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憲政이나 민권, 그리고 滿·漢·蒙·回·藏 다섯 종족이 반드시 하나의 정부 아래 나란히 서야 하며, 결코 그들을 분리 독립시켜 각국의 領土保全主義와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君主·民主의 문제를 兵力으로 해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兩方の 停戰을 요구하여 國民會議를 발기하여 국민의 公議로 결정하되, 어떤 결정이 나든 君主·民主 양당은 모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⁶³⁾ 즉 그리고 이 선언문에 첨가된 簡章은 1) 전국 영토 통일의 유지. 2) 양당에 의한 停戰 요구와 臨時國民會議 조직에 의한 君主·民主 문제 해결과 전국 전쟁의 위험 회피. 3) 北京 정부와 武昌軍政府에 대한 請願 등을 제안하였다.⁶⁴⁾

62) 「國事共濟會宣言附簡章」, 聞少華輯, 「國事共濟會宣資料」, 「近代史資料」, 51, pp.113-116. 또는 劉晴波主編, 「楊度集」(湖南人民出版社, 1986), pp.538-540이나 「國事共濟會宣言附簡章」, 「經緯報」(1911.11.19), 渤海壽臣編, 「辛亥革命始末記」, 二(近代中國史料叢刊, 第42輯. 臺北文海出版社, 1969) 「論說」, pp.1363-1368에도 실려 있다.

63) 위와 같음.

國民會議에 의한 國體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共濟會의 주장과 관련, 후에 袁世凱의 대표로 南北議和에서 북방 대표로 나서게 되는 唐紹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바 있으며, 실제 나중에 이루어진 南北議和의 합의점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共濟會의 정치적 입장은 실제적으로는 武昌蜂起 이래 袁世凱 측의 시국에 대한 대응 내지는 탐색을 대변하는 것, 나아가서는 楊度를 대변인으로 삼아 袁世凱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⁶⁵⁾

그런데 共濟會에 관한 자료는 이 선언문과 簡章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의 모습을 제대로 되살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共濟會에의 참가자는 汪精衛, 楊度 외에 陸宗輿, 汪榮寶, 汪大燮, 黃爲基(黃遠庸) 등이 있고,⁶⁶⁾ 또한 楊度の 위촉으로 『大同報』의 주필이자 君憲論者였던 旗人 英升과 王輯唐 등에 의해 奉天 지부와 吉林 지부가 결성되었으며,⁶⁷⁾ 天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였다는 것 정도가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⁶⁸⁾

64) 앞서의 宣言書와 簡章 외에 이에 대해서는 觀渡廬編, 「南北議和史料」, 中國近代史資料叢刊 『辛亥革命』(上海人民出版社, 1981) 第8冊, p.79; 陶菊隱, 『籌安會六君子傳』(中華書局, 1981), p.60; 丁文江·趙豐田編, 『梁啟超年譜長編』(上海人民出版社, 1983) p.580, 589 등을 참조. 한편 이 무렵 梁啟超 역시 기본적인 정치적 방침으로써 “袁世凱와 화해하고 革命派를 무마시키면서 滿洲朝廷을 압박하여 漢族의 요구에 굴복하게 하는 것(和袁, 慰革, 逼滿, 服漢)”(p.558)을 고려하고 있었다.

65) 沈雲龍, 「民國初建與南北議和」, 『傳記文學』 63-1, 1980, pp.12-13. 그리고 물론 실제로 國民會議가 성립되었을 경우 그것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局面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國民會議의 조직이 共濟會 활동의 궁극적 목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66) 王曉秋, 「清末政壇變化的寫照—宣統年間『汪榮寶日記』剖析—」, 『歷史研究』 1989-1, p.81; 胡鄂公, 『辛亥革命北方實錄』, p.78. 沈雲龍, 「袁世凱與汪兆銘」, p.103.

67) 「奉川國事共濟會副會長榮升致吉林督練參議王函」(1911.12.2), 「榮升致趙爾巽函」(1911.12.4), 第一歷史檔案館編, 『清代檔案史料叢編』 第8輯(中華書局, 1982), pp.52-54, p.62.

하지만 共濟會의 선언서 및 簡章을 보도한 『經緯報』의 기사는 이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기사는 國事共濟會의 발생이 “저명한 정객 某人이 정부를 위해 꾸민 密策으로 袁內閣의 李議長이 크게 찬성하고 革命黨 가운데 汪精衛 등 역시 여럿이 그 계획에 넘어간 것”이라면서, 모 정객이 논의한 이 共濟會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1) 共濟會가 주장하는 國民會議의 소집은 한, 두 달 후가 아니면 개회가 불가능한데, 이 두 달 중 各省의 인심이 해이해지면 湖北이나 山西 등의 要省은 반드시 (정부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 (2) 일단 개최하면 君主立憲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다수를 차지한다.
- (3) 共和를 주장하는 표가 다수가 되더라도 역시 반드시 반대하는 여러 성이 있을 터이니, 그때는 국민과 국민이 싸우게 되어 정부가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 (4) 京城의 공황을 틈타 사람들이 도망하거나 돌아갈 때 몰래 의원을 파견하여 피난한다는 구실로 거금을 가지고 돌아가 고향의 의원, 군인들에게 운동을 하여 그들이 君主立憲을 주장하게 하되 따르지 않는 자를 암살한다면, 國民大會가 열릴 때 정부가 더욱 실패할 염려가 없을 것이다.⁶⁸⁾

이 기자의 정보나 정치적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共濟會의 활동이나 장래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의 일면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대체로 정치적인 음모를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는 취지가 분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楊度는 共濟會의 성립 이후 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11월 17일 資政院 의원 范源濂·劉澤熙의 소개를 통해 資政院에 진정서를 올려 ‘具奏請旨’를 요청하였고,⁷⁰⁾ 11월 23일에는 다시 내각에 代奏

68) 劉民山, 앞의 논문, p.17.

69) 『國事共濟會宣言書 附簡章』, 『經緯報』(1911.11.18), 『近代史資料』 51, pp.115-116.

를 요청하였다.⁷¹⁾ 아직 독립하지 않은 곳은 단지 直隸와 河南 두
 省뿐이라면서 停戰을 실행하고 신속하게 임시 國民會議를 열어 君
 主·民主 문제를 의결하겠다는 上諭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⁷²⁾
 선언서에서 밝힌 것처럼 北京 정부 측에 대한 운동은 ‘君憲黨’인 楊
 度가 맡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11월 20일 이미 ‘人數不足’의 상태 하에서 열린 資政院
 제2차 常年會 제11차 회의에서는 范源濂이 적극적으로 나서 楊度
 의 진정서에 동의하고 劉述堯·李文熙 등 여러 의원이 거기에 합류
 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대자들이 격렬한 말로
 반대하고 의장이 크게 시끄러워져 의원들이 다수 퇴장해 버려” 회
 의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⁷³⁾ 또한 이를 둘러싸고 다시 담화회를
 열었지만 양파의 분쟁은 여전하였다.⁷⁴⁾ 이후의 資政院 회의는 결국
 반대자(주로 旗·滿, 欽選議員)의 출석 거부와 다수 의원의 出京으로
 資政院 자체가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楊度の 이
 운동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楊度の 운동은 단순한 여론반응의
 탐색 정도에 그치게 되었을 뿐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大不濟
 事)”이다.

그러면 남방 革命軍 측의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떠하였을까. 汪精
 衛의 공식적인 동향은 이후 (上海軍政府를 통해) 武漢의 黎元洪과
 南京의 張勳에게 ‘停戰息兵’으로 ‘和平解決’을 기대하자고 通電하였

70) 楊度, 「致資政院陳情書」, 劉晴波主編, 『楊度集』(湖南人民出版社, 1986), pp.540-541.

71) 楊度, 「楊度呈請內閣代表書」, 『國民公報』(1911.11.26), 聞少華輯, 『國事共濟會
 宣資料』, 『近代史資料』 51, pp.116-117.

72) 楊度, 「楊度呈請內閣代表書」, 『國民公報』(1911.11.26), 聞少華輯, 『國事共濟會
 宣資料』, 『近代史資料』 51, pp.116-117, 또는 劉晴波主編, 『楊度集』(湖南人民
 出版社, 1986), pp.541-542를 참조.

73) 「資政院第十一次會議紀略」, 『經緯報』(1911.11.22), 『辛亥革命始末記』 二 「資
 政院」, pp.1221-1230 또는 『近代史資料』, pp.117-118.

74) 「共濟會大不濟事」, 『民立報』(1911.11.30) 第3面(또는 『近代史資料』 51, p.120).
 「資政院陪行解散之原因」, 『經緯報』(1911.12.2), 『辛亥革命始末記』 二 「資政院」,
 pp.1232-1233. 『時報』(1911.11.22, 11.27, 11.29, 12.1, 12.5) 第1面記事.

으며, 이에 대해 黎元洪이 共濟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汪精衛의 신속한 上海行을 요청하였다는 것만이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⁷⁵⁾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京津保同盟會에서 함께 활동한 胡鄂公은 汪精衛의 행동에 상당한 비난을 가하면서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의 활동은 공개적인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막후에서의 교섭에 주력이 쏟아진 것처럼 보인다.⁷⁶⁾

하지만 共濟會에 대해서 남방 革命軍의 기관지격이었던 『民立報』는 11월 19일자 「言論自由」란에서 馬君武가 전 국민의 共和理性이 거의 至明한데 汪精衛가 共濟會에 가담한 것은 “너무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未免太退化)”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고,⁷⁷⁾ 21일자 「무聊한 공제회(無聊之共濟會)」라는 社論(『民立報』 기자 徐血兒 집필)에서도 이것을 “황당하고 쓸데없는 짓(荒謬無聊)”이라고 하면서 “共濟會의 설립은 전국 共和黨人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는 강력한 부정의 입장을 보였다.⁷⁸⁾ 같은 날짜의 기사인 「共濟會의 종지는 어디에 있는가(共濟會之宗旨何在)」 역시 이를 “君主立憲論者들이 꿈을 꾸고 있다(憲客做夢)”거나 “立憲君主論者들의 헛소리(憲客放屁)”라 조롱하고 있었다.⁷⁹⁾ 당연히 汪精衛

75) 『時報』(1911.11.18, 11.21) 第一面記事.

76) 沈雲龍, 「汪兆銘與袁世凱」, 『傳記文學』 94-5, 1986, pp.105-108에서는 당시 汪精衛의 행적과 관련해 張國淦와 汪精衛의 행동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었던 胡鄂公의 기재가 서로 달라 그의 구체적인 행적이 수수께끼가 되지만, 胡漢民의 기술이나 『民立報』 등의 기사로 보아 실제로는 南北議和 이후 남하하여 줄곧 上海에 있었다는 쪽에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波多野善大, 「辛亥革命の南北議和と汪兆銘」, 『小野勝博士頌壽記念東方學論集』(京都, 1982), pp.511-532는 보다 세밀한 논증을 통해 남북간의 의견조정을 떠맡은 汪精衛가 12월 9일 남북 화의를 위해 唐紹儀와 함께 北京에서 上海로 가 18일의 제1차 회담에 참가하였다가, 歸京하여 21일 胡鄂公과 만나고 그 다음날 袁世凱를 만난 다음 다시 北京을 떠나 上海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25일에는 귀국한 孫文을 上海에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77) 『民立報』(1911.11.19) 「言論自由」.

78) 『民立報』(1911.11.21).

79) 위와 같음.

에 대해서는 “일세영웅인 汪兆銘이 마침내 오랑캐 조정에서 죽이지 않은 은혜를 배운 데 감동하여, 滿洲 황실을 위해 대신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共和를 주장한다면 各省 대표들이 君主·民主 문제를 토의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⁸⁰⁾

共濟會의 선언은 『時報』가 11월 22일, 23일에 나누어 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는 아직 선언문 자체를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民立報』는 그 뒤에도 12월 10일 그 ‘해산 선언서’를 실기 이전에는 共濟會에 관한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⁸¹⁾ 다만 11월 21일자에만 「德文電報」를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共濟會의 성립을 간단히 기록하였을 뿐이다.⁸²⁾ 『時報』의 경우 이와는 달리 11월 16일 이래 계속하여 연일 共濟會에 대해 간단하나마 보도하고 있어, 분명히 이와는 다른 자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11월 21일자의 「時評」에서는 汪精衛가 北京의 더러운 공기에 오염되어 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었다.⁸³⁾ 그리고 아마 이 무렵이 되어서야 共濟會의 「宣言書」 및 簡章의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民立報』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중국 혁명은 본래 漢族이 독립하여 국가를 조직하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滿·蒙·回·藏 4大民族이 共和國 가운데 함께 서서 마찬가지로 자유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지금 천하의 절반 이상이 光復되었고, 만약 立憲黨人이 대세의 귀결을 헤아릴 줄 알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滿清 황실을 무너뜨린다면 전쟁의 재앙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멸이 근본적인 방법이고,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찌

80) 「無聊之共濟會」, 『民立報』(1911.11.22) 社論(『近代史資料』 51, pp.118-120).

81) 『民立報』(1911.12.11) 「共濟會如此下場」.

82) 『民立報』(1911.11.21) 第3面 記事.

83) 『時報』(1911.11.21) 第4面 時評二 「可疑者二」.

다시 5大民族의 영웅인물들이 마침내 한 두 명의 무식하고 야만적인 皇族에게 굴복한다는 말인가?...오늘날 君主는 상서롭지 못한 것이 되어 단연코 중국에서 용납되기 어려우니, 몇 마디 말로 다투는 토론에 부칠 필요도 없다. 어찌 다시 이런 쓸데없는 거동에 나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는 말인가!⁸⁴⁾

이것은 共濟會의 성립 후 남방에서는 共濟會나 汪精衛의 가담의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당시로서는 아직 議和論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도 아니었던 까닭에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共濟會의 입장에 대해 부정을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흥미 있는 것은 『民立報』의 경우 徐血兒가 쓴 11월 23일자 5항의 「歡迎革命家黃復生羅偉璋」이란 기사이다.⁸⁵⁾ 이 기사에서는 汪精衛와 함께 암살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었고, 그와 동시에 석방되자 上海로 온 黃復生·羅偉璋 두 사람을 환영하면서 이들을 통해 누명을 쓰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汪精衛의苦心을 알게 되었으므로 얼마 전의 그에 대한 汪精衛에 비난은 잘못이었다고 바로잡는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徐血兒는 汪精衛의 ‘영웅심리’를 칭송하고 있으며 이어 24일, 25일의 기사(「血淚語三」, 「英雄之愛情」)에서도 ‘영웅’인 그에게 극도의 칭송을 보내고 있다.⁸⁶⁾ 결국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黃復生·羅偉璋 두 사람의 증개를 통해 남방의 革命軍 측에서도 汪精衛의 의도에 대해 일정한 파악을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후의 『民立報』에서 汪精衛에 대한 비난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汪精衛의 평화적 해결 시도가 사실상 袁世凱의

84) 「無聊之共濟會」, 『民立報』(1911.11.22) 社論(『近代史資料』51, pp.118-120).

85) 『民立報』(1911.11.13) 第5面 「歡迎革命家黃復生·羅偉璋」.

86) 『民立報』(1911.11.24) 第5面, 「血淚語」(三); 『民立報』(1911.11.25) 第一面 「英雄之愛情」.

武力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던 남방 革命軍에게 상당한 매력과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남방에 ‘알려진’ 汪精衛의 의도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共濟會의 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남북 사이의 평화적 해결에 의한 共和政體의 수립(袁世凱의 권력장악을 전제로 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남방을 설득시켜 양해를 얻어내고, 그를 ‘영웅’으로 간주하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로서는 물론 議和의 가능성이 제기되긴 하였지만 袁世凱측의 강력한 공세에 의해 漢陽이 淸朝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아직은 거기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력하게 남방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방안만으로 설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해석으로 汪精衛가 평화적 해결을 꾀하게 된 것이 淸朝의 몰락이 거의 확정된 상황 아래서 신속한 共和政體의 수립이라는 목표 외에도, 혁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시로서는 아직 거취가 분명하지 않았던 袁世凱에 대한 회유 내지는 예측되는 그의 ‘帝制自爲’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려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 점에 의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남방의 양해를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추측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汪精衛의 석방 직후 北京에 있던 程家禔은 汪精衛에게 이러한 점을 충고하였다고 하며,⁸⁷⁾ 汪精衛의 영웅적인 심리에 ‘감동’한 徐血兒가 바로 뒤이어 袁世凱의 ‘帝制自爲’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⁸⁸⁾ 더구나 그러한 徐血兒가 바로 다음날에는 ‘推賢讓能’을 주장하면서 袁世凱에

87) 馮自由, 『革命逸史』 第6輯(中華書局, 1981), p.56.

88) 『民立報』(1911.11.26) 第1面 「討袁世凱」(一), 第4面 「討袁世凱」(二).

대한 ‘추과’를 보내는 것은 袁世凱에 대한 견제를 통해 汪精衛의 ‘의도’를 뒷받침해주려 한 것, 또는 적어도 汪精衛의 의도에 대한 일정한 동의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楊度와 汪精衛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共濟會의 활동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民立報』의 기사가 이를 “共濟會無濟於實事”로 조롱한 것처럼 북방에서는 앞서도 얘기하였지만 淸朝 측의 반대와 다수 의원의 이탈에 의한 資政院의 무력화로 애초의 의도가 무산되어 버렸고, 남방에서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共濟會는 성립 후 단 2주일 여 남짓한 12월 5일, 資政院의 의결 요청과 내각에의 代奏 呈請, 上海軍政府 및 武昌軍政府에 보낸 汪精衛의 전보에 대해서도 회답하지 않거나(武昌), 단지 國民會議만 승낙할 뿐 停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上海)에서, “武漢에서 벌어진 血戰 때문에 전투가 치열해져 평화적 해결이 어렵게 된 것은 천하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바가 되었고, 그래서 共濟會의 주장은 이미 무효로 돌아가 버렸다”며 특별하게 해산을 선언하게 되었다.⁸⁹⁾ 하지만 그 다음날 淸朝의 攝政王이 뒤로 물러나고 袁世凱가 모든 用人行政을 장악하는 全權大臣으로 임명되면서 淸朝의 大權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共濟會는 이 시점에 그 효용이 다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불어 南北議和가 본격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의 의견을 조절하기 위한 매개로서 汪精衛와 楊度, 魏宸組 모두 거기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 선언서에서 내건 이유처럼 평화적 해결의 전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사실일까? 당시의 상황은 간단히 말

89) 「國事共濟會 解散宣言書」(1911.12.5), 『楊度集』, pp.542-543 ; 「共濟會如此下場 - 楊度盡惑之無效 : 國事共濟會解散宣言書」, 『民立報』(1911.12.11), 『近代史資料』 51, pp.120-121. 「解散共濟會宣言書」, 『辛亥革命始末記』 二 「論說」, pp.1376-1377.

해 11월 27일 袁世凱 측의 공세에 의한 漢陽의 함락 이래 12월 2일 革命軍에 의한 南京 점령으로 약간의 반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北伐에 의한 清朝 타도라는 전망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12월 2일 武漢地區에서 3일간의 停戰 협상 이후 혁명 국면이 무장투쟁에서 본격적인 南北議和로 나아가게 되는 時點에 있었다. 더구나 해산을 선언한 다음이기는 하지만, 12월 9일 革命軍의 중심 지도자였던 黃興은 袁世凱가 反正할 경우 大總統으로 추대하겠다는 이전부터 논의되던 의사를 汪精衛에게 보낸 전문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다.⁹⁰⁾ 당시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共濟會가 의도하던 남북 타협에 의한 清朝 퇴진과 共和政體의 성립, 袁世凱의 大權 장악이란 방안이 도리어 현실화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共濟會가 표면적으로 내걸었던 國民會議에 의한 政體 결정이란 방식이 12월 하순에 본격화된 南北議和에서의 최종합의점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역시 共濟會의 노력이 결코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共濟會의 해산 이유를 표면적인 설명만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汪精衛와 楊度는 이후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보여 두 사람 모두 上海에서 열린 南北議和에 대표로서 참가하여 袁世凱의 권력장악을 위한 길을 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순수하게 革命黨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는 하였지만 汪精衛의 경우 심지어는 1912년 1월 中華民國을 선포하고 臨時大總統에 취임하여 袁世凱와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리던 孫文에게 大總統의 지위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냐고 강박하기 하였다고도 일컬어진다.⁹¹⁾ 楊度の 경우도 종전의 종지를 버리고 共和促進會를 성립시켜 사실상 袁世凱의 권력장악을 위해 노력하는

90) 黃興, 「復汪精衛電」(1911.12.9), 「黃興集」(中華書局, 1981), p.94.

91) 吳玉章, 「辛亥革命」(人民出版社, 1967), p.157; 鄧警亞, 「汪精衛誤國記」, 「辛亥革命回憶錄」第8冊(文史資料出版社), p.419.

모습을 보였다.⁹²⁾

따라서 共濟會의 해산은 표면적으로 내건 것처럼 평화적 해결의 전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武昌蜂起 후 초기단계에서 袁世凱 측의 시국에 대한 모색이 오히려 확실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共濟會는 공개적으로 내건 이유와는 달리 원래 의도하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고, 汪精衛와 楊度の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해산되었던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는 汪精衛·楊度の 革命論과 立憲論, 그리고 양자에 의한 共濟會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제 다시 汪精衛의 활동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순서로 초점을 맞춰보자. 위에서 보인 것과 같이 결국 汪精衛가 袁世凱의 집권을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것을 汪精衛 개인이란 차원에서 파악하면서 그의 小英雄主義와 自己顯示欲에 의한 意氣, 암살기도와 투옥 및 석방이라는 격변의 체험에서 나오는 심정적 변화, 혁명 정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李石畬의 영향, 그리고 袁世凱에 대한 환상 등으로 상당한 설명이 가능하다.⁹³⁾ 하지만 이러한 汪精衛의 개인적인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聯袁倒清’이라는 방안은 그에게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당시의 革

92) 楊度, 「與薛大可等發起共和促進會宣言書」(1912.1.26), 『楊度集』, p.543-544. 이때 楊度는 남북의 통일을 추구하려면 먼저 북방의 共和實行을 추구해야 한 다면서도, 時勢에 떠밀려 사사로운 黨見으로 瓜分의 禍를 부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共和制로 전환하기는 하였지만 民憲·君憲 여부보다는 국가와 영토의 보전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하겠다.

93) 波多野善大, 「辛亥革命期の汪兆銘」을 참조.

命派 일반에게도 상당히 보편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과 관련, 武昌蜂起 이후 舊立憲派뿐만 아니라 革命派·革命軍에게도 ‘革命瓜分論’으로 대표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이 작용하였다는 점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인용한 共濟會의 「宣言書」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 혁명에 즈음한 각 민족의 분리 독립 및 남북 대립이 결국은 外人의 간섭과 瓜分을 부르게 되므로 亡國을 가져온다는 논리였다.⁹⁴⁾ 이것은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과거 특히 立憲派가 혁명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반대논거 가운데 하나였다. 더구나 이 「宣言書」에 서명한 汪精衛의 경우는 이러한 立憲派의 ‘革命瓜分論’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반박을 가하였던 사람의 하나였다. 따라서 汪精衛의 ‘서명’은 이 시점에서 그가 일단 과거의 주장을 내버리고 舊立憲派(또는 간단히 말해서 楊度)의 주장에 굴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을 辛亥革命 발발에 의한 정치적 형세의 급변이라는 외부환경 탓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점은 과거 革命派의 논리가 반드시 ‘革命瓜分論’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가한 것은 아니었고, 일정한 정도로 立憲派의 논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것만은 아니다. 앞서 제시한대로 「駁革命可以召瓜分說」(『民報』 6호)과 「駁革命可以生內亂說」(『民報』 9호) 등의 여러 논설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의 논리를 폈던(사실 그리고 이것은 “밖으로는 열강의 均勢를 믿고 안으로는 국민의 意力을 믿는다”고 한 孫文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기도 하였다) 汪精衛 자신도 혁명만이 瓜分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혁명을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利害’의 문제가 아니라 ‘是非’의 문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儉安苟活’보다는 ‘모험’이 낫

94) 「國事共濟會宣言附簡章」, 聞少華輯, 「國事共濟會宣資料」, 『近代史資料』 51, pp. 113-116. 「楊度集」, pp.538-540; 「辛亥革命始末記」二 「論說」, pp.1363-1368.

다고 하였던 점에서 革命派의 ‘意氣’ 자체가 (舊)立憲派의 논리를 정면으로 극복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瓜分의 위기의식은 실제적인 혁명의 과정에서 항상 그 국면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가능성을 잠재시키고 있었으며, 실제로 武昌蜂起 이후 이러한 우려는 점차 革命派나 革命軍, 또는 그 반대파 등 중국의 정치적·외교적 현실과 장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현실적인 ‘힘’과 압력으로 커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袁世凱의 경우도 남북 사이의 타협에 의한 해결로 사태를 이끌어가면서 내세운 근거나, 汪精衛와 면담하면서 내세운 논거 역시 바로 共濟會가 내세운 것과 같은 瓜分危機論이었지만,⁹⁶⁾ 楊度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共濟會나 共和促進會와 관련해 항상 이것을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었다. 여전히 立憲君主論을 견지하면서 共和制를 반대하였던 북방의 『天津大公報』를 보아도 이러한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혁명에 찬성하는 분위기로 일신하면서 남방 측의 입장을 대변한 『民立報』를 비롯하여 『時報』, 『申報』의 경우에서도 혁명 과정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분열·혼란이 가져올 外人의 간섭과 궁극적인 瓜分에 대한 위기의식은 역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모인 주제가 되고 있었다.⁹⁷⁾

물론 武昌蜂起 이후 신속한 혁명에의 호응과 확산이 이루어지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革命軍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袁世凱의 등장 이후 革命軍의 일방적인 또는 군사적인 승리에 의한 성공이라는 전망이 점차 불투명해지면서 革命에 대한 外人의 간섭, 그 결과로서의 궁극적인 瓜分이라는 위기의식은 적어도 남방 革命軍의 행동을 규정하는 데 훨씬 더 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앞서 든 通電에서 黃興이 袁世凱의 추대

95)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金衡鍾, 앞의 논문(1989)이다.

96) 丁文江·趙豐田編, 『梁啓超年譜長編』, p.567. 또한 『時報』 1911.12.1 第2面 「袁世凱宣布政見」等.

97) 金衡鍾, 위의 논문을 참조.

의사를 내보이면서 “北京이 일찍 戡定되지 않는다면 外人의 간섭을 부를까 두렵다” 하고, “결국 동남 인민이 項城(즉 袁世凱- 필자)에게 희망을 갖는 것은 조속히 완전한 토지를 회복하고 外人의 의외의 간섭을 면하려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⁹⁸⁾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12월 21일, 23일자의 『民立報』에 발표되고 陳其美·汪精衛·馬君武 등의 舊革命派 인사와 張謇·伍廷芳 등 立憲派 측 인사가 발기인이 된 「共和統一會宣言書」 역시 戰禍의 연장이 가져올 列強의 간섭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혁명의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⁹⁹⁾ 이러한 주장은 남방 革命軍 측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瓜分의 위기의식은 결국 袁世凱와의 타협에 의한 혁명의 結束, 즉 ‘廉價의 成功’¹⁰⁰⁾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汪精衛의 경우 一說에 의하면 출옥 이후 “만약 袁世凱가 淸朝 정부와 힘을 합쳐 항전한다면, 북방의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 대립의 국면으로 이어져 전국에 유혈사태가 초래되고 재앙은 끊이지 않아, 외국인이 이를 틈타 瓜分을 시행한다면, 중국은 滿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때문에 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목적은 특히 袁世凱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한다.¹⁰¹⁾ 이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지만, 그가 과거에 내세웠던 革命瓜分論에 대한 반박의 논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반대편의 논리를 채택하여 전개하고 있음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共濟會에 참가하거나, 袁世凱의 이익은 결국 혁명의 이

98) 黃興, 「復汪精衛電」(1911.12.9), 『黃興集』, p.94.

99) 『民立報』(1911.12.21, 12.23) 「共和統一會意見書」.

100) 『民立報』(1911.12.27) 社論 「和乎戰乎」.

101) 歐陽雲, 「炸前淸袁內閣紀實」, 『中華民國開國五十年文獻』(臺北, 1962) 第1編 13冊. p.717.

의이라고 하면서 袁世凱에 의한 이용과 혁명동지의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북방에서의 혁명 봉기를 저지하고,¹⁰²⁾ 袁世凱의 비밀대표로서 南北議和에 참가하여 막후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袁世凱 정권의 성립을 위한 길을 닦게 된 것은 분명 ‘매수’나 ‘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것이고, 그러한 행동의 동기는 바로 앞서 설명한 논점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汪精衛의 활동은 이전의 암살 기도나 이 시기의 활동에서도 드러나는 小英雄主義的인 행태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 혁명동료 胡漢民의 회고처럼 “(議和의 성사에 노력한 자신과 汪精衛가) 功之首이지만 동시에 罪之魁라 할 수 있다”¹⁰³⁾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있어 이러한 선택은 어쩌면 “역사의 대착오라기보다는 차라리 특정한 조건 하에서 피하기 어려웠던 역사적인 선택”¹⁰⁴⁾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汪精衛는 물론 당시의 革命派·立憲派·舊官僚 등 대부분의 일반 여론 역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만큼,¹⁰⁵⁾ 이 시기 그의 활동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상태(이른바 革命瓜分論으로 대표되는)를 고려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102) 胡鄂公, 앞의 책, p.89. 또한 북방에서의 革命運動과 汪精衛에 대해서는 林能士, 「辛亥革命時期京畿地區的革命活動」, 『國立政治大學學報』 37-8, 1978; 林能士, 「辛亥時期北方地區的革命活動」, 『近代中國』 13, 1979; 晉隆岡·薛偉強, 「京津同盟會與直隸辛亥革命」, 『河北師範大學學報』 33-3, 2010 등을 참조.

103) 胡漢民, 「胡漢民自傳」, 『革命文獻』 第3輯(臺北, 1978再版) p.433.

104) 丁賢俊, 「論孫中山民元讓位」, 『歷史研究』 1988-6, p.142.

105) 楊華山, 「武昌首義後時人對袁世凱的期盼心態探析」, 『中州學刊』 1996-6.